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법으로 다스리자는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이다. 이상적인 법에 의한 통제는 사회 내의 갈등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막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전근대 조선왕조에서도 법에 의한 통치를 표방하였는데,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종성현(祖宗成憲)으로 불리며 왕조차도 합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규율로 작용하였다. 그렇게 보면 전근대 조선왕조를 국왕 한 사람의 독단으로 움직이는 전제 왕조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에서는 15세기에 완성된 경국대전 체제를 19세기까지도 운용하였으니 법률이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는 장본이 되기도 하였다. 현실의 모든 갈등을 법률로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법률도 어느 순간에도 완전할 수가 없는데, 오래될수록 불완전성의 밀도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왕조의 낡은 법률 질서인 경국대전 체제를 극복해 보고자 '경제유표(經世遺表)'를 저술하였다. 정약용 스스로 '신아구방(新我舊邦)'이라는 개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념으로 이 작업의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낡은 우리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정약용은 개헌과도 같은 새로운 법률 질서 수립의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당시의 현실도 곱씹고 있었다. 자신이 죽은 뒤에 나 임금께서 살펴보시라는 뜻의 '유표(遺表)'가 제복에 들어간 것도 그런 판단의 귀결일 것이다. 정약용은 다시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통해 경국대전 체제 하에서라도 최대한 백성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 보려고 하였다. 목민심서의 작업은 현행 법률을 인정한 상태에서 민생을 위한 해석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국대전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저술했다는 목민심서의 곳곳에서 당시의 모순된 현실 체제에 대한 부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수법(守法) 대목에서도 백성을 편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다소 법을 넘나들 수도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갓난아이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黃口僉丁) 대목에서는 이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백성이 모두 죽고 말 것이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모순에 대한 분노가, 이따금 해석 투쟁의 경계를 넘어 신아구방의 체제 개혁 투쟁으로 비약하는 것이다.

정약용이 곡산부사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나타난 이계심(李季心)이란 백성은 1천여 명의 백성들을 조직하여 전직 사또에게 항의의 전력이 있었다. 일종의 불법시위 주도자로 체포 즉시 처벌될 예정이었는데 1년 동안의 도피 끝에 신임 사또 정약용 앞에 자수한 것이다. 처벌하자는 아전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정약용은

오히려 시위의 원인이 되었던 폐단을 바로잡을 기회로 삼으며 이계심을 칭찬하였다. 정약용은 법의 원칙을 어긴 것일까?

법에 의한 통제가 진정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합리적으로 제정되어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신념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정 과정의 합리성이나 적용 과정의 평등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라면 법치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개혁의지를 꺾는 폭정의 논리가 될 뿐이다. 정약용은 그 폭정의 길을 차마 갈 수 없었던 것이다. 가령 곡산의 아전들처럼 법을 적용하면 이계심은 처벌되고 곡산의 폐단은 바로잡힐 기회를 잃을 것이다. 그랬다, 법의 이름으로 백성들만 처벌되고 세도정권과 탐관오리는 법 위에 군림하며 나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 19세기 조선 왕조였던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훌륭한 문장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평등권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수계급을 설정할 수 없음과 특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11조를 두고 고(故) 노회찬 의원은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한 바 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3권이 힘을 합쳐, 상속에 회피한 재벌이나 뇌물 받은 검사에게는 따뜻한 햇살을 비추다가, 800원 잔돈 자판기에 넣은 버스기사나 뇌물 검사 무단 폭로한 의원만 골라 불을 뿜는 법치주의라면, 차라리 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유발하는 부비트럼이다. 한반도 북쪽의 핵무기만 자기파괴적 무기는 아니다.

社說

면허정지 절차 돌입, '의-정' 협상 테이블 앉아야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정하고 압박하자 의료계가 지난 3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로 맞섰고 이에 정부가 곧바로 미복귀 전공의를 상대로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전국적으로 7000여명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도 전남대 119명, 조선대 106명이 병원을 떠난채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삼급종합(3차) 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전임의 34명이 추가로 병원을 떠나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어제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우리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병원을 찾아 현

장 파악을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최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복지부의 현장 점검을 근거로 경찰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고 의료계의 반대 명분도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퇴로 없이 강대강으로 밀어붙인다면 의료 공백까지화로 결국 피하는 국민(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제 밥그릇' 쟁기겠다며 국민을 불모로 잡고 있는 의료계가 먼저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일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정부도 원칙은 지키되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00명 증원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왜 2000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필수로 분야의 수가 조정과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가 오랫동안 건의해 온 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발포책임자 등 미완 과제로 남은 5월 핵심 의혹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엊그제 공개한 조사결과 보고서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법적으로 규명해야할 17개 직권 조사 과제 가운데 13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먼저 공개했다. 보고서는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건으로, 사실상 5·18 이후 44년만에 나온 정부의 공식 5·18 진상조사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부 새로운 사실을 재조명하고 규명하는 성과를 제시했다. 정부가 그동안 행방불명 보상신청사를 거쳐 85명만 행방자로 인정했으나, 진상조사위는 94명을 추가로 인정해 모두 179명으로 늘렸다. 5·18 사망자 166명 가운데 135명(81.3%)은 총상, 17명은 폭력, 12명은 차량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하는 등 사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하지만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암

매장 등 총 6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 결정을 내렸다.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자행된 5월 21일 발포 명령자와 집단발포 경위는 규명하지 못했다. 암매장 규명과 행방자 조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구나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퇴보한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광주시민을 향한 발포를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등·경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조작·왜곡된 문 건 등등을 인용해 곳곳에서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공개된 보고서가 오는 6월 최종 발간되면 국가가 공인한 진상조사 보고서가 된다는 데 있다. 진상조사위는 시민과 5·18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히 수용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등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도록 검증해야 한다. 5·18 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진상조사위가 밝혀 내지 못한 5·18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40칼럼

'물컵의 반'은 언제 채워질까



임용철 다큐멘터리 감독

"일본과의 협력이 기미독립운동의 목적이오 정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다시 한번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기념사를 했다.

이번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의 사과나 과거사 문제는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대통령 연설 뒷배경은 해당 문구의 앞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자유대'로 읽혀져 온라 인상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에너지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라는 작년의 역대급(?) 3·1절 기념사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구애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본인들이 정해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이 행사에 한국의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고 올해도 영도 문제를 담당하는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고유의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일본 정식 외교 의제로까지 다루겠다는 일본의 주장이 기미독립선언서까지 들먹이며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 세상'인지 윤 대통령에게 분지 않을 수 없다.

2월 24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일본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무대에 올려 퍼졌고 600여석의 객석을 꽉 채운 한국의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일제히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다.

일제 강점기인 1944년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조선인 소녀들의 강제노역과 인권유린의 현장을 고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가까이 나섰던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40여 년 동안 펼친 재판투쟁과 인권회복 운동 과정을 그린 연극 '봉선화Ⅲ-기억과 계승'의 한 장면이다.

이번이 세 번째 무대에 오른 연극 '봉선화Ⅲ'는 1998년부터 일제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을 도와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와 연극단체 '아이치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모임'이 합작해 만들었고 2003년과 2022년 일본 나

고야 공연에 이어 한국의 피해자 출신 지역에선 처음 선을 보였다.

무대에 오른 출연진은 연극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배우가 아니라 중학생부터 직장인, 퇴직자까지 나고야시의 평범한 시민들로, 나고야의 강제동원 현장을 둘러 보고 역사를 공부하며 연극을 준비했다고 한다. 원고 양극대 할머니 역할을 맡은 무토 요코(58)씨는 "할머니의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일본) 시민으로서 미쓰비시와 (일본)정부가 부끄럽기에 미쓰비시와 정부는 과거에 저질렀던 행실을 피해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8년 지진으로 운명을 달리한 소녀들의 유가족을 찾아 한국에 온 일본의 소송지원회 사람들을 처음 만났던 이경자(82·나주 거주) 할머니는 "연극을 보면서 지진에 죽은 고모님(최정례) 생각이 나 눈물을 흘렸다"며 "미쓰비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도 해매고 있다"면서 더 늦기전에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바랐다. 친구들과 함께 연극을 본 중학생 최현후군은 "일본에서 세 번이나 기각당하고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할머니들이 기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감을 남겼다.

감동적인 대법원 판결이 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지만 일본 전법기업이 배상했다는 뉴스는 없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부고 소식만 들려온다. '물컵의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차 변제' 해법을 정부가 발표한 지 1년이 되어 간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며 '물컵의 반'은 언제 채워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기고

광주공항 부지를 백만평 숲 바이오필릭시티로



이철갑 조선대병원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023년 4월 '광주군공항이전법'이 제정된 후 아직 이전할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군공항 이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항 이전과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중전 부지(현 군공항)'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광주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에는 막대한 이전 비용을 감당하려면 대규모 아파트단지도 개발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설득력 있게 퍼져 있다.

광주시가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개념의 개발 사업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해서 더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250만 평에 이르는 중전 부지 중 100만 평 이상을 숲으로 조성하자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백만평 광주숲 추진위원회'가 광주시청 앞 잔디밭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발한 시민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 광주시는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 비율이 전국에서 세종시(84.9%)에 이어 두 번째(75.3%)로 높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시 경관을 무시한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예전에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등산을 이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에 비해 세종시는 아파트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획해 건립했기 때문에 광주처럼 편밀집적인 콘크리트 숲은 아니다. 이러한 아파트 과밀화로 광주시의 경우, 시민 힐링공간이나 숲·생태 공원이 5.8%로 서울의 15.4%보다 턱 없이 부족하다. 영국 런던은 전체 면적의 23.5%가 숲이나 생태공원이라 한다.

군공항을 이전하고 난 뒤의 중전 부지에 아파트 숲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백만평 숲 활동을 통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중전 부지는 광주의 중심이자, 허파와 같은 위치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라도 탄소흡수원으로 녹색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미래가치는 생태적·사회경제적 상생과 자연순환, 개성과 다양성으로 포용하는 공동체의 연대에 있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 창의적 인문도시, 사람과 기업이 찾는 역동적 경제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공간이 필요하다.

우리 광주시민은 이미 20년 전 광주역에서 효천역에

이르는 패철도 선로 부지를 '푸른길'로 조성한 경험이 있다.

중전 부지는 극락강과 황룡강이 만나 영산강을 만드는 장록습지와 연결된다. 장록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흰목물떼새를 포함 829종이 살고 있다. 장록습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군공항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만약 중전 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우를 범한다면 장록습지도 1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장록습지와 연결된 백만평 숲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장록습지와 서창들녘, 영산강 등과 연계한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대규모 숲공원과 수변림을 조성한다면 영산강 수질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백만평 숲과 더불어 백만평 규모의 바이오필릭 스마트 시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광주의료원과 같은 병원, 헬스케어 요양단지, 국내외 대학과 지역기업 공동캠퍼스, 국제학교, 국제업무지구를 유치하여 국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한다면 순천만정원박물관 관람객 연간 1000만명이 부러울까?

시민 한 명 한 명이 한 그루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백만평 숲 기금 조성에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시민의 기금에 국비 등을 합쳐 다음 후속세대에게 영원한 광주 숲을 남겨주는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無等鼓

난센스 퀴즈 하나. 고전소설 '흥부전'(박타령) 주인공인 흥부의 자식은 모두 몇 명일까? 놀랄게도 아들만 25명으로 나온다.

"스물다섯 되는 자식 다른 사람 자식 낳듯 한 배에 하나 낳아, 삼사 세 된 연후에 낳고 낳고 했어야 사십이 못다 되어 그리 많이 낳겠느냐. 한 해에 한 배씩 한 배에 두셋씩 대고 낳아놓았구나..."

여러 날 굶은 흥부가 놀부 형님 맥을 찾아가지만 몽둥이로 볼기짜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이를 본 흥부 부인은 신세 한탄을 한다.

저출산 사회

"집승은 미물이나 입으로

시절에 10남매, 또는 12남매 가운데 막내라는 친구들을 간혹 접했다. 만형이나 큰 누님과 나이가 차 한 세대 이상 벌어지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한국의 인구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국방과 교육, 경제 성장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으로 예상된다. 가난과 배고픔을 이겨낸 '베이비 붐 세대'(1946~1964년생)는 현재의 '선진 한국'을 이루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청년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과 아이 양육·교육 부담, 경력 단절, 직장·육아 병행 어려움 등 다양하다. 흔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땀질 처방이 아니라 부담없이 다둥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아이, 한 아이 새 생명의 탄생에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